



환경부, 생활 소음 저감 대책 추진

## 도시의 소음 'Volume Down'

현대인들은 바쁘고 정신없다는 말을 자주 쓴다. 생활환경 속 소음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가 발표한 생활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 김소진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이든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 서울은 각종 소음들로 사람을 지치게 한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점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로 도시 한복판은 시끌벅적하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아파트, 상가, 빌딩 공사장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곳도 우리나라일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도시와 주택가를 가보면 너무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도시의 다운타운을 가도 차량 소음이 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도 크게 시끄럽지 않다. 특히 주택가는 너무 조용해서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좁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은 아닐까? 부천시는 저소음 노면 포장도로와 방음벽 설치, 공사장 소음 관리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해 대부분 지역에서 소음 감소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개 도시의 2004년도 소음도 측정 결과, 27개 도시가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했으며, 2000년 7480건이었던 생활 소음 민원은 2004년 2만9576건으로 5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소음, 진동과 관련된 민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환경 분쟁 174건 가운데 86.8%를 차지했다.

**피아노 학원, 노래연습장도 소음 규제 기준 정해**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 7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진행되며, 도로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도로를 설계, 건설하고 방음벽과 방음 터널을 확충할 예정이다.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의 76%를 차지하는 건설 공사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공사장 종류와 지역별로 구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고 정도가 심한 소음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교통 소음의 저감을 위해서도 디젤 철도 차량을 전기 철도 차량으로 교체하고 철도교통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철도 주변 지역을 교통 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 저감 운항 절차를 개발해 운용하고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도시 지역에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한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 지도를 작성해 소음 평가 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가에 많이 있는 피아노 학원, 체육도장을 비롯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관련 법규에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는 등 방음·방진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개 등 동물을 영업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에도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 소음에 대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합동 대책을 마련한 것은 도로와 철도공사,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소음 발생 원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긴 했지만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